

인터넷 윤리 소양 시험

특
집
05

목 차

1.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의 개요
2.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의 필요성
3. 일본의 사례
4. 국내 도입 시 고려 사항

양병연 · 김익잔
(카톨릭대학교)

1.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의 개요

IT기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오프라인 세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IT 기술의 보급으로 인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생활의 혼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1, 2]. 앞으로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생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급격히 성장한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알맞은 온라인 세계에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켜야 할 도리, 즉 인터넷 공간에서의 도리(인터넷 윤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예의 기여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개인과 기업의 인터넷 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아웃소싱 위주로 외부회사나 시스템에 의존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는 인터넷 윤리의 확립을 위

한 선행과제로 놓여 있다[3].

인터넷 윤리 문제는 최근 많은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가면서 개인의 신용정보,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며, 기업에서도 인터넷 윤리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인터넷 역기능 방지와 함께, 사회적 예방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포함하는 인터넷 윤리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 5].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제도는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인터넷 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정보보호나 인터넷 윤리 수준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 확산을 통해 건강한 정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 및 기업에서 인터넷 역기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터넷 윤리 평가 방법에서부터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르기까지 인터넷 윤리 인증 시험제도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윤리는 개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지켜야 할 주관적인 가치의 문제일지라도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사회에서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 신뢰할 수 있는 네티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인정받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바로 자신과 기업에게 돌아가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시대에 하나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윤리 평가와 인증은 개인과 기업에게 있어서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다[5].

2.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의 필요성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세계 최고의 초고속 속망을 이룬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 초고속 인터넷을 통해 스팸메일로 넘쳐나고, 불건전 자료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속도 경쟁에만 매달릴 단계를 지나 정보 윤리를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해야 할 시대가 왔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정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확립해야 할 정보윤리란 무엇을 뜻하는가. 정보윤리는 정보산업(IT) 종사자 개인차원의 윤리와 기업차원의 윤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T 종사자로서의 정보윤리란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 및 시스템에 대해 부당하게 유출, 변조, 중단, 파괴하지 않으려는 제반 도덕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보윤리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우대되어야 하며, 정보윤리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보관리를 못하게

해야 마땅하다.

인터넷 윤리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구성된 기업은 더 높은 인터넷 윤리 수준의 기업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적합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여 그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윤리 수준이 높은 기업은 당연히 고객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금융기관의 평가에 운영위험을 반영하겠다는 바젤 II 제도하에서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정보서비스를 위탁 운영해 줄 정보서비스제공자(ASP)에게 있어서 그 기업의 인터넷 윤리 수준의 중요성도 자명하다.

그런데 누가 개인이나 기업의 인터넷 윤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신력 있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는 마치 개인과 기업의 신용평가와도 흡사하다. 최근 개인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신용불량자가 양산 되었다. 그렇다고 신용사회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체계와 적절한 감독 기능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인터넷 윤리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윤리'란 개념은 개인들 스스로가 알아서 지켜야 할 주관적인 가치의 문제로 여겼을 뿐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일은 대단히 불쾌하고 부담스런 일이었다. 물론 인터넷 윤리를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오늘날 고객에 돌아가고, 이것이 사회적 현상이 될 때 신뢰성 있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윤리의 평가와 인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문제는 어떻게 인터넷 윤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정보를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하여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모델로서 소양 시험과 마련하는 것은 인터넷 윤리 모범사례를 배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하여 궁극적으로 인터넷 윤리가 선언적 형태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토대로 구축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윤리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업의 신뢰성이 단순한 도덕적 흠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간에 해외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강력한 경영리스크로 평가받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또한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공신력 향상 차원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양 시험의 국제화에 우리가 앞장 서는 것도 정보화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윤리란 지키는 것은 옳으나 개인적으로는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윤리를 지키겠다는 의로운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자세가 사회 보편적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윤리 인증제도와 같이 사회적 반응에 의해 범죄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윤리수준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우대받는 전향적 제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에서 시작된 윤리의식의 부활이 행복한 정보화 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를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운전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교육과 함께 면허증을 주는 것은 운전 교육의 충실 및 내실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 윤리 교육의 충실 및 내실화를 위해 인터넷 윤리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윤리 인증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 인증제를 '개인용 인터넷 윤리

인증제'와 '기업용 인터넷 윤리 인증제'로 구분해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용 인터넷 윤리 인증제'는 평가 항목을 준중, 책임, 절제, 규범, 기술로 나누고, '기업용 인터넷 윤리 인증제'는 조직과 인력 영역, 제도·규정 영역, 자율적 노력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증 시험 이후 인증서에 대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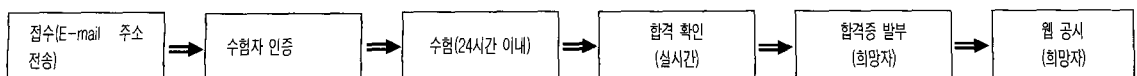
인터넷 윤리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및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윤리 소양 시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윤리 관련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윤리 소양 시험이 인터넷 윤리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는 (재)인터넷 협회라는 것이 2001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인터넷 발전 추진, 경제사회 발전,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현재 정보통신 윤리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검정 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시험 명칭은 '인터넷상에서의 룰과 매너 검정'인데 이 시험은 인터넷 사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건강한 인터넷 사회를 위해 기술과 서비스 충실 이외에 룰과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시행하고 있다[6].

3.1 소양시험 방법

E-mail로 접수를 받고 24시간 이내에 시험을 본다. 시험 합격 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며 합격증은 희망자에 한하여 발부 받게 된다. 시험은



(그림 1) 시험 처리 절차

일반과 청소년으로 나뉘는데 일반은 100문항 중 90문항 이상을, 청소년은 30문항 중 27문항 이상을 맞아야 한다. 비용은 일반은 3000엔, 청소년은 1000엔이다.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3.2 소양시험 시행 실적

<표 1>에 시행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표 1> 검정 시행 실적

회차	시기	신청자수	대상
1차	2003년 7월 12일~8월 31일	17,779명	일반
2차	2003년 11월 17일~12월 19일	4,020명	일반
3차	2004년 3월 22일~4월 23일	3,702명	일반
4차	2004년 8월 10일~9월 10일	9,512명 (4,510명)	일반 (청소년)
5차	2005년 5월 16일~7월 15일	-	-

<표 2> 시험 범위(일반용)

카테고리	개요
기본사항	- 인터넷 이용에 관한 기초 사항 - 인터넷의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방법
보안	- 권리와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안
관련 법규	- 인터넷 이용 상의 관련 법률
전자메일	- E-mail 기초지식과 노하우 - E-mail 사용상의 룰과 매너
커뮤니케이션	- 전자게시판, Net News, 채팅 시의 관련 룰과 매너
웹페이지	- 웹을 통해 정보를 보내거나 서비스 제공사의 룰과 매너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 경매, 정보서비스 이용 외 전자정부 관련 지식
기초 기술	- 컴퓨터와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초 기술 지식

3.3 일반용 시험 범위

일반용 시험 범위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3.4 청소년용 시험범위

청소년용 시험범위는 일반용보다 범위가 적다는 것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시험 범위(청소년용)

카테고리	개요
기본사항	- 인터넷을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
관련 법규	- 인터넷 이용 상의 관련 법률
전자메일	- 전자메일 이용시의 매너
커뮤니케이션	- 전자게시판, 채팅 시의 관련 룰과 매너
웹을 이용한 정보 제공	- 웹을 통해 정보 제공사의 매너와 주의 사항
웹 서비스 이용	- 웹 서핑 또는 쇼핑을 이용시의 매너와 주의사항

3.5 합격자 현황

<표 4>에 합격률 및 자격증 수령 비율 등이 나타나 있다.

<표 4> 합격자 현황

구분	접수 수	응시 생수	합격자수	합격률	평균점	자격증수령 (비율)
1차	18,654	17,779	4,196	29.98%	82.5	978(23.31%)
2차	4,260	4,020	626	19.3%	75.7	305(48.7%)
3차	3,899	3,702	674	24.5%	76.0	400(59.3%)
4차	10,091	9,512	1,284	20.2%	76.8	378(29.4%)

4.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

4.1 소양시험 시행 고려사항

4.1.1 개인용

가. 평가 대상

1) 일반인 대상 (초, 중, 고 포함)

초, 중, 고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의 소양 시험은 바람직한 인터넷 세상이 되도록 네티즌으로서 지켜야 할 네티켓, 인터넷 법률, 인터넷 기술 등을 포함한 소양시험을 실시한다. 소양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윤리교육 혹은 정보통신윤리 관련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

2) 대학생 대상

대학생 대상의 소양시험은 학점 취득의 방편으로 소양시험을 실시한다. 소양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윤리교육 혹은 정보통신윤리 관련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

나. 활용 방안

1) 일반인 대상 (초, 중, 고 포함)

문제 유형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풀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인증서를 부여한다. 또한 인증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인증서를 받을 때 일종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하나 인증서에 따른 어떠한 혜택이 없다면 인증 시험을 굳이 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2) 대학생 대상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시켜 소양시험을 볼 수 있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인터넷 윤리 관련 문제점 제시 및 해결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문제 유형에 맞게 주어진 문제를 풀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성적점수는 pass나 fail로 주는 방법과 점수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한 학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지만 차후 윤리 의식이 약해진 경우에는 성적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정보통신윤리에 관련된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반드시 수강하도록 한다면 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초·중·고 또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통신윤리 관련 일을 몇 시간동안 하는

등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윤리의식을 갖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시험 유형 및 운영

1) 유형

표준화된 문제유형을 제시하여 인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문제유형은 초·중·고(일반인 포함)와 대학생으로 나눈다. 초·중·고(일반인 포함)의 경우에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자가 지켜야 될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문제유형에 많이 포함시키고, 인터넷 기술과 법률 부분의 문제들을 줄여서 출제한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조금 줄이고 인터넷 기술과 법률 부분의 문제를 늘려서 출제한다.

2) 운영

운영에는 3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인터넷 윤리 관련 민간차원의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 인터넷 윤리 관련 민간차원의 인증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 세 번째로 인터넷 윤리 관련 민간차원의 인증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누구나 쉽게 시험을 볼 수 있지만 공신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라. 시행 방식

시험 시행 방식으로는 온라인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표 5>는 2가지 방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5> 시험 시행 방식

구분	시행 방식	특징
1안	온라인 방식	전산으로 처리 시스템 구축비용 요구
2안	오프라인 방식	문제지, 감독, 시험 장소 등 많은 시험 준비 사항이 필요

4.1.2 기업용

청소년보호[7]와 함께 정보통신 윤리의 정착·확산에 필요한 기업의 인터넷 윤리를 평가하여 인증하기 위한 제도의 명칭으로는 기업 정보통신윤리 인증제도와 기업 인터넷윤리 인증제도 그리고 청소년보호 인증제도를 제안하며, 정보통신윤리 평가기준에 의해 인증된 기업에게 주어지는 마크의 명칭으로는 기업 정보통신윤리 인증마크와 기업 인터넷윤리 인증마크 그리고, 청소년보호인증마크를 제안한다.

가. 평가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제21조3)에서는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기업으로 다음의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의 웹사이트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의 웹사이트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3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가 해당 기업이 된다. 그러므로 정보통신 윤리 평가 대상으로는 상기의 기업(이하, 필수기관이라고 한다)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종 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상기 조건 즉, 필수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이하, 선택기관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기업용 정보통신 윤리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 방침이 갖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서와 관공서 산하 기관의 웹사이트를 필수기업에 포함시키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평가 방법 및 절차

기업용 인터넷 윤리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서면으로만 평가하는 방안과 서면 및 실시평가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기업이 청소년 보호를 통해 인터넷 윤리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면과 실시평가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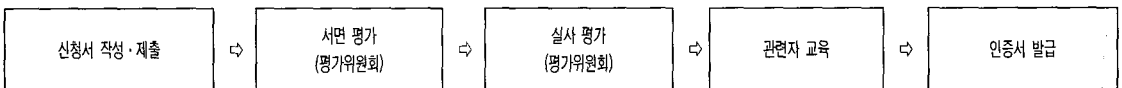
기업에 대한 인터넷 윤리 평가는 먼저, 평가 대상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 시행기관에 제출하면 평가 시행기관 산하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면 평가 및 실시평가)를 통해 인증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인증 대상 기관으로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자(청소년보호 관련 인력과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처리 관련 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와 동시에 해당 기관에 기업용 인터넷 윤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관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에도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등 기관의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평가 절차를 나타낸 모습이다.

4.2 소양시험 실시 고려사항

4.2.1 개인용

가. 시험 정보

인터넷윤리진흥본부가 2005년 11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만들어졌으며 대학생들의 인터넷 윤리의식이나 실태를 파악하고자 전국 대학의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윤리 시범시험을 12월 초에 시행하였다. 시험의 주안점은 인터넷 윤



(그림 2) 평가 절차

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 습득에 중점을 두었고, 형식은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되어있으며, 50분간 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평가 항목

1) 존중

정보통신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가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와 같은 프라이버시와 통신예절을 지킴으로써 상대를 높이고 소중히 여김을 평가한다[6].

2) 책임

정보통신사회에서 법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개인의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나 제재를 떠맡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지적 창작활동에 의해 얻어진 지적재산권과 불건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평가한다.

3) 절제

정보통신사회에서 감성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습관적으로 불건전 정보를 접촉하는 게임, 음란물 중독을 포함한다. 중독의 경우는 지나치게 불건전 정보를 접촉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4) 규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두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구속되고 준거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판별하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불건전 사이트에 대응하는 태도로서 신고 유무를 평가한다.

5) 기술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웹 브라우저 활용기술, 스팸메일 대응기술, 보안이나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받고 불건전 정보를 차단하는 등 인터넷 윤리를 기술적 차원에서 실현하는 기술의 수준을 평가한다.

4.2.2 기업용

가. 평가 항목

기업의 인터넷 윤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부분과, 기업 스스로가 청소년 보호를 실천함으로써 인터넷 윤리 의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조직과 인력’ 영역과 ‘방침 및 제도·규정’ 영역을 들 수 있다.

1) 조직과 인력 영역

크게 조직과 인력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 업무와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기관 내에 편성하도록 규정이 구비되어 있는지와 함께, 실제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보호 업무와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수에 의해 평가한다.

2) 제도·규정 영역

제도·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 정보 관리,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처리, 제재조치로 구분한다. 유해 정보 관리 부분에서는 성인 인증 관련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관련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 청소년 유해 정보 카테고리 및 검색 키워드 관리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 불법·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 처리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사이버폭력 신고 처리 부분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 신고 처리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그리고 제재조치 부분에서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제재 규정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3) 자율적 노력 영역

전통적 윤리뿐만 아니라, 인터넷 윤리의 경우에도 윤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의지

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스스로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크게 교육 홍보 및 봉사 부분과 사이버 폭력피해 신고 처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 홍보 및 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네티즌 대상 교육 및 홍보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피해 신고 처리 부분에서는 사이버 폭력 피해를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3 인증서 정책 방안

4.3.1 개인용

가. 인센티브

- Email의 서명에 개인인증 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인증 마크를 받은 사원이 전체의 50%가 넘을 경우에 기업인증 마크를 부여함
- 통신료를 할인(정통부나 통신회사의 협의 요구) 또는 마케팅 정책으로 사이버 머니를 줌
- 각 포털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함
- 기업 입사 시 가산점 부여
- 대학 입학 시 가산점 부여
 - 정보통신윤리 봉사도 봉사점수로 인정
 - 인터넷 윤리 자격증 소지자는 봉사 몇시간을 대체
 - 교육부와 협의 요망
- 인증서에 급수가 있는 경우 급수에 따른 특혜를 줌

나. 정책 방안

인증서 정책 방안으로는 제도화를 하거나 인증서 취득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8]. <표 6>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인증서 정책 방안

구분	정책 방안	특징
1안	제도화	- 강제적 - 인증서를 소지하려는 사람이 많아짐 - 혼선을 줄일 수 있음
2안	유도	- 강제성이 없음 - 인증서를 소지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 있음 - 사이트별, 업체별 등 자체적인 적용 방식이 다름 - 있으므로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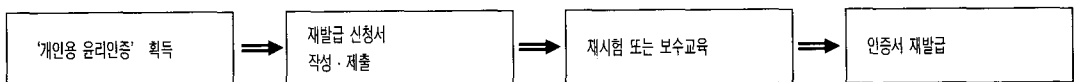
다. 인증서 유효 기간 및 재발급 절차

유효기간은 개인인 경우 5년이 적당하다고 보며 인증서를 갱신하기 위해 재시험을 치르거나 윤리위원회 등에서 보수교육을 열어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 갱신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은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 인증서 취소 및 고려사항

가입되어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사이버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가 발견되었을 시 최초 경고, 이후 재발생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고려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소양시험을 통해서 급수에 따른 윤리 자격인증 부여
- 각 포털사이트마다 인증을 거치도록 한 후 회원 가입하도록 함



(그림 3) 인증서 재발급 절차

- 인증 테스트는 일반 사용자보다 사이트 개설자에게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함

4.3.2 기업용

가. 유효기간 및 인증서 취소

기업용 인터넷 윤리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발급서류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행기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청소년 보호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윤리의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한다. 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평가 시행기관 이외에 네티즌들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평가시행기관에서는 신고접수 창구를 통해 네티즌들의 모니터링 결과를 접수받는다.

평가 시행기관에서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및 네티즌으로부터 접수된 모니터링 결과에 해당 행위의 비윤리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당 행위가 비윤리적 행위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시정 요청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인증서 취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인증업무의 주관기관에서 메스컴을 통해 인증서 획득기관의 홍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증서 취소 기업에 대해서도 메스컴을 통해 인증서 취소 여부를 홍보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윤리와 디지털사회”, 2005년.
 [2] 정보통신윤리교육 연수자료, [http://www.c-sindong.es.kr/data_bank/data/\(16715\)연수자료1.hwp](http://www.c-sindong.es.kr/data_bank/data/(16715)연수자료1.hwp)
 [3] 추병완, 유병철, 김이태, 정연실, 정은정, “사이버 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신일인쇄사, 2001.

[4]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방지종합대책(안)”, 1999.
 [5]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보윤리 인증제도 연구”, 2004.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년 사이버명예시민운동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5.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 평가척도”, 2004.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인증제도 연구”, 2005.

저자약력



왕 병 언

1986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1989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석사)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공학박사)
 1994년 - 현재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1999년~2000년 University of Minnesota Visiting Scholar
 관심분야 : 지리정보시스템, XM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정보검색



김 익 안

1999년 가톨릭대학교 전산학과(이학사)
 2001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공학석사)
 2001년 - 현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데이터 마이닝, 공간 데이터베이스, 전자상거래, XML, 데이터베이스